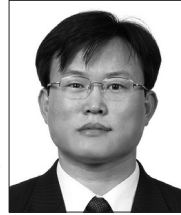


중국 시진핑 정권의 개혁 정치와 이념적 지향



나 영 주(강원대학교 강사)
<yz08@yahoo.co.kr>



I. 여는 말

정치는 사실 이념 편향적이다. 집정 권력을 강화하거나 그들의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마련이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시장 경제를 체제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병리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 평등을 지향하려는 그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간섭과 관여가 현실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체제가 진정한 사회주의 인기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교과서적으로 자본주의 전유로 알려진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사회

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운영하여 비약적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국 모델'이라는 논쟁도 뜨겁다.

2012년 11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 및 중앙 군사위 주석에 취임하고 2013년 3월 중국 정부의 주석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시진핑 집권 시대가 열렸다. 집단 지도체제의 속성을 가지는 중국의 현 권력 구조하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결정이 갖는 권위는 지극히 막강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사회 영역에 투입시키는 체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대한 비전을 응축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향후 10여년을 가늠할 중대한 비전과 결정이 시진핑이 권력을 승계한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의 정치적 행보와 2013년 18기 3중 전회의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21세기 전반부 중국의 양개 백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신중국 건설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중화민족의 부흥'과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달성하겠다는 집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향후 시진핑 정권에서 추진할 거시적인 정치, 경제적 개혁 의제도 2013년 11월 18차 3중 전회에서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생 정치를 강조하면서 친서민적인 소박한 정치적 행보도 보여주고 있다. 총서기에 취임하자마자 당 간부의 부패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권력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개혁 정치가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논지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지향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틀을 다음 장에서 마련하였다. 시진핑 정권의 공식적 지배 이념이 갖는 상대적 좌표의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 사회-정치체제를 포함한 의미로서-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념을 소개하고, 권력 투쟁의 이면에 권력투쟁과 노선의 갈등이 감추어진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의 의미를 이념적 맥락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후 다음 절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강조된 '중국의 꿈'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개혁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마오쩌둥 스타일의 '정풍운동'과 '균중 노선'이 갖는 의미, 시장 개혁 추진 상황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지향은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공산당의 영도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대해 점진적인 개혁 방식을 취하는 연성적인 개발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II. 예비적 논의 :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좌표 설정의 문제

권력 교체기에 중국 정치를 전망할 때 매양 던져지는 질문이 중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어디로 향한다는 질문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이것은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혹은 사상, 노선)을 가지고 중국을 영도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른바 권력 교체기 개혁 정치의 이념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다. 시진핑이 권력을 승계하고 나서 그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와 논쟁은 시진핑 지도부가 처한 개혁 정치의 복잡한 국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꿈’이라는 담론의 정치적 슬로건화, 입헌주의 논쟁, 군중 노선의 부활, 반부패 운동, 신형 대국관계의 요구, 새로운 중화민족을 주조하는 신중화주의의 승계,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에 관한 갈등, 정치 부문의 자유주의 사조의 차단, 여전한 언론과 인터넷의 통제 등으로 나타나는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은 결코 과거와 단절적이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은 무엇이고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어디쯤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가 있는가? 단지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정치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본질적으로 갈등을 동반하는 정치에서 사유의 다름은 행동의 다름을 가져온다. 그것이 통치 행위에 투영되고 다수의 피치자들이 그것에 동조할 때 지배 이데올로기는 공고화된다. 그것은 비단 사회주의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18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당장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언론의 소란은 그냥 소란이었고 황당한 추측일 따름이었다.¹⁾ 중국 발전 자체는 무수한 논쟁에 휩싸여 진화하였다. 중국이 획기적인 변모를 꾀할 때마다 ‘중국 위협론’, ‘중국 기회론’, ‘중국 붕괴론’, ‘중국 분열론’ 등이 득세하였으며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외에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논의와 연계된 ‘중국 모델론’이 목하 논쟁 중이다.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현실 중국의 진단과 미래 중국의 비전을 두고 무수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특색의 발전과 보편적 가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²⁾ 이러한 논쟁은 개인적 사유에 바탕하고 있으나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새삼스레 중국은 지금 이념적 백화제방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³⁾

중국 학계와 지식인 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의 분류 도식으로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좌표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쟁 중심의 지식인들이 공산당의 집정 이념을 개

1) 헤리슨 포, 슌즈베리, 『새로운 황제들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 개정증보판, 박윌라, 박병덕 역(다섯수레, 2013), p. 703.

2) Jianmin Qi, "The Debate over 'Universal Values'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72)(November 2011), pp. 881-890.

3) 중국 지식인 사회의 이념적 분파에 관해서는 조경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글항아리, 2013), pp. 70-71.

발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들도 있기 때문이다.⁴⁾ 공산당의 집정 이념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판적인 인사들은 공산당으로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 인사가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류샤오보(劉曉波)이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다. 통상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상에서 이념의 분류는 지향하고 있는 가치, 즉, 자유와 평등, 분배와 효율, 시장에 대한 관점, 국가의 역할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 중국에서 이념적 유파의 분류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지식인 사회의 이념적 유파의 명칭이 형식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신좌파가 좌익인 셈이고 자유주의자들이 우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적 상황과 서양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해 비판적 입장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서양의 좌파라면 중국은 이러한 기능을 우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확대 문제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훨씬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집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자유주의자들이다. 중국의 신좌파는 21세기 들어 국가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통상 알려진 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등식이 중국적 상황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우파적 성향의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최소한 중국의 현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전복하려고 하는 '진보'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 이런 이념의 논쟁과 논란이 그대로 집정 이념으로 투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논쟁에서 선별적으로 중국의 현 상황에 맞는 이론적 자원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시기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사회적 현실에 대한 세계관'으로 정의하고 지배 정치(공식적)이데올로기, 지배 사회(비공식적) 이데올로기,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 대항 사회 이데올로기로 분류하여 분석한 바 있다.⁶⁾ 이 논의를 차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상황에서 대항적 정치 이데올로기는 없다. 다당제적 형태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념적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이념적 지도가 교육되거나 학습된 형태로서 또는 소멸되지 않은 유습이나 전통의 복원으로서 지배 사회 이데올로기, 체제의 특성상 아직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지 못한 지식인들과 일부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념 담론으로서 대항 사회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 논의에서는 주로 지배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시진핑 집권 이후의 집정 이념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러한 이념적 좌표를 추적하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이념적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논쟁 중에 신좌파의 논리는

4)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문기, “중국 지식인과 국가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중국학연구』, 제47집 (2009), pp.187-216.

5) 조정란(2013),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 자유주의 신유가』(글항아리, 2013), p.53.

6) 손호철, 『현대 한국 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사회평론, 2003), pp.155-157.

중국 공산당의 집정 이념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공식적인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까지는 아니지만 대항사회 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한 자유주의자들의 논의도 시진핑의 이념적 지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비교 이념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항사회 이데올로기가 정치영역에서 공론화될 때, 즉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게 될 때 중국은 다당제와 (서방식)민주주의에 한층 더 가까운 체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지식인들의 주요 논쟁을 제공하는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주요한 입장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사상 논쟁이 현실 정치와 결부되어 노선 및 권력 투쟁과 연계된 ‘보시라이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다.

Ⅲ. 중국 사회의 이념 지형 및 노선 투쟁

1. 지식인 사회의 이념적 지형

현 중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 처방을 설계하는 중국 지식인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그 기원과 분화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언급되는 이념적 유파를 일별하자면 신좌파, 자유주의파, 신유가(문화적 보수주의파), 사회민주주의파(또는 민주사회주의파), 구좌파(마오좌파), 대중민족주의파, 신민주주의론파 등이 존재하고 있다.⁷⁾ 이 유파를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의 단순화된 형태인 좌우의 일차원의 공간에 모두 배치하기에는 사상의 출현 및 발전과정이 복잡하고 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의 편차가 크다. 주요한 분류 기준으로는 마오쩌둥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시장)의 지구화, 국가와의 관계, 서구 근대성(보편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유파별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 내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지배적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중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처방⁸⁾을 주요 사안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지향을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의 사유는 중국 공산당의 집정 논리로 사용되거나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신좌파로 분류되는 일군의 지식인의 지칭은 시장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마오 시대의 구좌파와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좌파는 문화대혁명이 일단락이 되고 난 이후 1970년대 말에 출현하였으나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정책을 선화하면서 현실적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계급투쟁과 공유제, 계획 경제 논리를 피력하고 있으며 문화대혁명의 의미와 의의에 변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마오 시대의 집산주의와 평균주의, 균중 노선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7) 조경란(2013), pp. 70-71, 50-52, 62 참조.

8) 중국의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사유와 논쟁에 관해서는 마크 레너드,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 중국 최고 지도부를 움직이는 지식 엘리트들』, 장영희 역(돌베게, 2011); He Li, "Debating China's Economic Reform : New Leftists vs. Liberal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5(2010), pp. 1-23.

있으며 마오쩌둥에 대한 사상적 숭배를 지니고 있기에 마오 좌파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해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좌파는 문화대혁명이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시장에 관한 사유에서는 이미 중국은 1990년 중반에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의 문제에서는 세계체제론의 맥락에서 중심으로의 잉여의 전이와 주변의 저발전으로 빈부격차를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중국 국가에 대한 정면 비판은 하지 않고 최근에는 당국가 체제를 옹호하고 있으나 시장의 확대와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보편적 가치 논쟁에서 서구적 근대성에 대해서는 사상적 굴곡을 보여주는데, 초기에는 중국적 시각에서 반성적 입장을 보여주다가 21세기 들어서는 다소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 바 중국모델을 창출하거나 역설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조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적 복지 국가를 설파한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빈부 격차의 원인을 시장의 도입과 시장 개혁에서 찾는다. 시장의 개혁에 따른 자본의 자유화는 이에 접근이 용이한 이들의 특권과 결부되어 빈부의 불균등이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며, 재산 공유제를 유지하고 국가가 부의 재분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함께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좌파보다 더 일찍 출현하였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자유주의적 사유가 발전해 온 것이다. 마오 시기의 통치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오시기의 이상주의와 전제주의적 통치행태는 중국이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대혁명의 과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과 시장에 관한 입장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며, 중국은 포스트 공산주의 사회, 혹은 권위주의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내재적인 구체체와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 개방을 심화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동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된다. 친시장적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시장화 개혁과 친화성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입장을 달리한다. 개인의 권

리가 국가 권력에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의 다른 유파보다 중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 법치, 민주, 인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통치의 합법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제



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현 중국 체제가 직면하고 개혁 개방의 부정적 측면이 시장화 개혁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이런 시장화 개혁의 미흡으로 인해 권력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지대 추구(rent-seeking) 현상이 팽배하고 빈부 불균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권력을 제한하고 시장 경제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개혁만이 현 중국 체제의 병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 유파와 함께 21세기 들어 ‘염황춘추(炎皇春秋)’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민주주의파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국 공산당 내의 민주파로 분류되는데, 그런 까닭에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국가적 성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오 시기의 통치에 대해서는 전제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평가하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유제에서는 공유와 사유제의 동시적 발전을 모색하는 혼합소유제를 선호하며, 서구의 사회시장경제, 복지보장제도를 중국이 따라야 할 발전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서구의 다당제, 의회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중국 지식인 사회의 이념적 논쟁은 여타의 이념적 논쟁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사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미래의 중국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관한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과거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중국의 근현대사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명사의 보편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좌파적 지식인들은 중국 근현사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이 봉건사회를 탈각하고 근대 체제로 이행하는 독특한 중국만의 길이 있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 통치 시기도 중국 나름의 발전 과정의 산물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하며, 중국적 예외주의(Chinese exceptionalism)를 강조하는 중국 모델론 논쟁의 중심에 신좌파들이 주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좀 더 중국의 보편적 발전 과정에 주목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민족 국가의 수립을 달성하였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라는 근대적 보편적 과제의 실현은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마오쩌둥의 통치 시기는 기껏해야 봉건적 사회주의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인식은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중국 체제의 발전 과정을 인류 문명사의 보편적 발전에 대입해 해석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적 발전 모델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권력 투쟁과 노선 투쟁 : ‘총칭 모델’과 보시라이 사건

노선투쟁이 꼭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도 경제 해법을 둘러싸고 케인즈식의 발전모델과 하이에크식의 발전 모델의 갈등과 대립이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문제와 시장에 국가가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모

두를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인간의 자유와 지선에 대한 가치 논쟁으로 확대된다. 중국에서의 공산당 내 이념 투쟁은 노선투쟁,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정치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사회주의만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노선투쟁, 권력투쟁이 전체주의의 음침한 망령이 득세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듯한 착시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과도한 공세 때문이다. 미국에서처럼 상대적 진보와 상대적 보수로 분류되는 자유주의 내에서 경쟁도 이념 간의 투쟁인 것이다. 유럽의 다당제 국가에서처럼 자유주의와 시민주의 정당들 간의 경쟁과 연합 역시 이념 경쟁이요, 노선 경쟁이며, 권력 경합인 것이다. 북지국가의 대표적 모델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모델의 초석을 놓은 사회민주노동당(SAP)이 20세기 오랫동안 집권하였으나 당내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복지와 성장에 대한 노선투쟁이 점철되어 왔다.⁹⁾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 이행 시기와 맞물려 중국에 두개의 발전 모델이 주목을 받았다. 왕양(汪洋)의 '광둥 모델'은 개혁 개방을 추진해온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 광둥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방식이다. 종래의 성장 지향의 '선부론'적이고 '불균형적 발전 노선'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로는 중국이 현재 심각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인 불균형 발전과 빈부 격차의 원인을 치유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광둥의 비약적 발전은 결국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의 결과물인데, 그 성장의 주역들이 성장의 결과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¹⁰⁾

비록 개인적인 권력 남용과 축재, 부패 사건으로 일단락되기는 하였지만 권력 승계기에 불거진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의 이념적 갈등과 이념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일단의 속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권력 투쟁과 노선 투쟁적 성격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보시라이가 충칭 서기 재직 시기에 이루어 놓은 이른바 '충칭 모델'은 중국 공산당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의 시범 사례로 각광을 받았다. 만연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특권, 특혜 및 빈부격차의 확대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듯 보였다. 보시라이의 휘하에 있던 왕리권(王立军)이 지휘한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 조직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호한 고위 관리들까지 척결하였다. 국유 기업의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농민공들에게 도시 후커우(戶口)를 제공하였다. 마오 통치 시기의 가난하기는 했지만 평등했고, 인민에게 봉사하는 관리들이 특권 의식 없이 청렴했던 사회의 복원을 꿈꾸었다. 혁명 가요를 부르거나 군중 집회를 활성화하는 '홍색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충칭 모델은

9) 옌니 안데르슨,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박형준 역(책세상, 2014).

10) 왕양은 2011년 말 발생한 광둥성 우칸촌(乌坎村) 시위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능력을 상당히 인정 받기는 했지만 그의 '광둥 모델'은 기본적으로 성장지향적이었다.

11) 정승욱, 『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함께 books, 2013), pp. 113-137.

중국 대중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읽었다고 볼 수 있다. 보시라이의 마오쩌둥주의 구호들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초기에 외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치의 또 다른 역설이다.

시장의 확대와 시장에 의한 개혁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민영 기업가들은 보시라이와 충칭 모델에서 문화대혁명을 연상하였다. 혁명적 방식으로 초법적 상황을 연출하는 보시라이의 충칭 모델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 불공정이 만연한 중국 사회에 분노하거나 실의에 빠진 많은 대중들에게 보시라이의 충칭 모델은 중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으로 보였다. 신좌파 지식인들은 이런 맥락에서 보시라이에 동조적이었다. 공산당 상층 지도부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그가 대중들 사이에서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 공산당을 넘어선 것과 강력한 군대와 공안 내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확장시켰다는 사실이었다.¹²⁾ 그런데 보시라이 사건은 권력 투쟁적 측면이 과도하게 노출되었지만 통치이념을 둘러싼 노선투쟁이기도 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을 연상하게 하는 보시라이식 포퓰리즘 모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왕양의 ‘광둥 모델’은 덜 급진적인 것으로 ‘싱가포르 발전 모델’과 유사하며 이는 현 공산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보시라이가 사법적 판결을 받아 정치적으로 낙마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충칭 모델’이 정치적으로 좌절된 것은 아니다. ‘공동 부유’에 대한 관심은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패 척결과 보시라이가 행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여전히 ‘충칭 모델’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 사실 ‘충칭 모델’의 발전 노선의 핵심인 ‘공동 부유’가 논란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실행 방식에서 과거 마오시기의 ‘정치운동’적인 방식이 동원된 것이 더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집권 초기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반부패 및 정풍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군중 노선을 통하여 민심의 불만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오 노선으로 회귀까지도 의심 받는 초기의 개혁 정책은 ‘충칭 모델’의 실천 방식과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대중이 생활수준 향상의 대가로 공산당의 일당집정제를 용인하는 ‘포스트 89년 체제’에 불만족스러워하면서(restless)서 다시 이데올로기가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¹³⁾며 “보시라이는 그런 정치적 대안을 형성한 첫 번째 인물일 따름이며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분석은 시사적이다. 이런 이념적 통치가 언제든지 대안으로 소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좌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왕후이(汪暉)는 이른바 ‘충칭’사건을 중국 인민의 보편적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

12) Andrew Browne, “Communist Party Is Split Over Bo Xilai’s Chongqing Policies,”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2, 2013,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730704579090170507137290?mod=WSJAsia_hpp_LEFTTopStories&mg=reno64-wsj&url=http%3A%2F%2Fonline.wsj.com%2Farticle%2F/SB10001424052702303730704579090170507137290.html%3Fmod%3DWSJAsia_hpp_LEFTTopStories(검색일: 2014.1.24)

13) “China’s struggle s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4, 2013, p. 9.

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⁴⁾ 이에 반해 사민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덩쉐량(丁學良)은 ‘충칭모델’이 탈법적인 문화대혁명 식의 권력 행사로 유지된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⁵⁾

그의 ‘공동부유’ 노선은 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노선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중국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탈색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했다. 그런데 마오 통치 시기 계획 경제 시절의 ‘정치 돌출’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 중앙지도부로 하여금 우려감을 갖게 만들었다. 시장적 기제의 작동을 역행하려고 하는 정치적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보시라이는 1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기를 원했다. 부하 직원의 망명을 계기로 촉발된 사건의 발단이 없었다면, 그래서 보시라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정국 구도가 형성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양과 보시라이 모델로 대표되는 발전 노선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IV. 시진핑 정권의 개혁 정치와 이념적 정체성

1. ‘중국의 꿈’ : 통치 이념 혹은 정치적 구호

후진타오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따라 굳건하게 나아가며,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자”는 업무보고¹⁶⁾를 끝으로 권력을 시진핑에게 넘기고 정치무대에서 퇴장하였다. 그가 주창한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지침으로 당장에 삽입되었다. 그와 10년 동안 권력을 분담했던 원자바오(溫家寶)의 “당과 국가의 영도(領導) 제도를 개혁하고, 민주 발전과 법치, 법제를 실현하는 것이 향후 5년간 중대하고도 긴급한 임무”라는 정치 개혁의 시급성에 관한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¹⁷⁾ 21세기 전반기에 중국이 맞는 ‘두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단결만이 강조되었다. 전면적인 생활수준이 중등 수준이 되는 소강 사회를 중국 공산당의 창당 100주년에 달성하고, 건국 100년이 되는 해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후진타오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시진핑의 공식적인 언급은 18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중화

14) 왕후이, “중정사건: 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 성근제 역, 『역사비평』(2012년 여름), p. 167.

15) 박민희, “중국 전환의 기로에 서다- 덩쉐량 홍콩 과기대 교수 인터뷰,” 『한겨레』, 2012. 2. 29.

16)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人民网』, 2012년 11월 18일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html> (검색일: 2014. 1. 15).

17) 원자바오는 보시라이 사건을 전후한 집권 말기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의 부단하게 역설하였으나 중국 국내에서의 반향은 크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서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 보도로 임기 말년에는 ‘서민총리의 이 미지마져 실추되었다.

민족의 부흥'이었다.¹⁸⁾ 중화민족의 부흥이 정치적 소재가 된 것은 두 개의 백년을 앞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사회주의 가치를 내리지 않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 부흥'을, 그것도 중화민족의 부흥을 정치적인 의제로 선택하고 강조한 것은 '중화민족'이라는 원초적 정서에 호소할 만큼 중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이 좀 더 세련된 형태로서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화두인 '중국의 꿈'으로 공식 등장한 것은 총서기에 취임하고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서였다.¹⁹⁾ 시진핑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시기에 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이 성취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중국의 꿈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의 꿈'은 시진핑의 개혁과 정책 전망을 제시하는 국정 키워드가 되었다. 2013년 3월 중국의 국가주석직을 승계하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강조되었다. 시진핑은 방법론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²⁰⁾ 2013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결정²¹⁾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정치적 화두로 등장하자 그 내용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통치이념이라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²²⁾ 시진핑은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실현하고 부강한 민주 문명과 조화로운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쟁취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고 밝힌 바 있다. 몇 가지의 전제가 있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국의 꿈'이라는 것이다. 한 민족국가 단위의 '부국강병'의 실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자고이래로 '부국강병'이다. 그렇게 본다면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여타 국가들의 목표와 다를 것이 없으며 지극히 진부한 집정 이념인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 단일 민족이라는 배경이 없이 지극히 개별적인 개인의 꿈을 고취시키는 정치적 선전으로 '개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중국의 꿈'은 집단적이다. 시진핑의 언급에 의하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등치되는 것이 '중국의 꿈'이다. 개인의 꿈은 중화민족 속에서 잠식되어 있을 뿐이다. '중국의 꿈'이 상징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은 아마도 서세의 침공으로부터 중국이 잠식당하기 직전 국운을 떨쳤던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연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극히 패권지향적인 시절이다. 그래서 '중국의 꿈'에 민족주의적

18) 习近平, "紧紧围绕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 学习宣传贯彻党的十八大精神——在十八届中共中央政治局第一次集体学习时的讲话," http://news.xinhuanet.com/2012-11/19/c_123967017.htm (검색일: 2014. 1. 16).

19) 조영남, "중국의 꿈 :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민음사, 2013), pp.20-21.

20) 习近平, "习近平在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闭幕会上发表重要讲话," 『人民网』, 2013. 3.17, <http://lianghui.people.com.cn/2013npc/n/2013/0317/c357183-20816399.html> (검색일: 2014. 2. 10).

21)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二〇一三年十一月十二日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通过)," 『人民网』, 2013. 11. 16, <http://politics.people.com.cn/n/2013/1116/c1001-23560979.html> (검색일: 2014. 11. 20).

22) 박민희, "중국의 꿈, 13억의 꿈," 『계간 민주』, 통권 8호(여름, 2013).

냄새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실현은 민족주의와 공산당 권력의 팽창이라는 2가지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²³⁾ 사실 ‘중국의 꿈’만을 가지고는 그의 이념적 좌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즉자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집단으로서 민족적 동질감과 폐쇄적 연대 의식이다. 역사적 배경이 전혀 없는 ‘아메리칸 드림’과는 달리 ‘중국의 꿈’은 역사적 동질성과 민족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적 신심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장쩌민 시기부터 ‘애국주의’를 앞세워 중화민족을 강조해왔다. 통일다민족 국가로서 새로운 ‘중화민족’을 강조하는 중국은 이제 모든 민족의 꿈을 ‘중국의 꿈’으로 뒤바꾸는 ‘변검술(變臉術)’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 측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집착과 고수, 주변국가에 그것에 대한 강요가 점점 데자뷔(Deja-vu)적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품모도 강조되지만 일방적인 대국외교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나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 지속적인 국방비의 증가 등은 주변국을 불안하게 한다. 국내적으로는 신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소수 민족을 ‘중화민족’의 용광로 속에서 중화시켜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중국의 꿈’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거나 대국의 자존심이 걸린 대외적 문제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꿈’은 공세적 민족주의로 언제든지 분장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에 앞선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다는 실용적 생각을 가지고 당시 소련과 동구의 붕괴 여파를 차단하고 시장 경제의 확대에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산당이 대변하는 계급에 탄력성을 불어 넣었다. 자산가와 지식인 계급을 공산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3개 대표론’(2001)이 만들어졌다. 후진타오 시기에서는 고도성장 발전이 우선적 목표이기는 하나 에너지, 생태환경, 계층 갈등, 도농 격차 등 개혁개방의 부정적 여파를 치유하기 위한 ‘과학발전관’(2005)이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중심의 발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매진이 능사가 아니라 발전을 지

속하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발전의 부정적 효과나 음영까지도 고려하는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치적 수사이지만 나름의 지도 이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앞선 지도자의 통치 이념처럼 시진핑의 집권 시에 통



23) “Xi Jinping and the Chinese dream,” *Economist*, May 4th 2013,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7070-vision-chinas-new-president-should-serve-his-people-not-nationalist-state-xi-jinping>(검색일: 2014. 1.22)

치 이념으로 기능하고 후대를 위해 중국 공산당의 장정에 포함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꿈’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더 정교한 후속적인 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의 꿈’이 시진핑의 집정 이념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앞 선 지도자들이 통치 이념과 비교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앞 선 지도자들과는 달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만드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은 특별히 정해진 노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길이 곧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이다. 중국이 걸어가는 길이 ‘중국 특색’인 것이다. 방점은 사회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 개혁 개방 과정에서 개발한 모든 이론과 실천들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인 것이다. 내외,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²⁴⁾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이 30년의 개혁개방의 위대한 실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60여년, 근대화 이후 170여년, 중화민족의 5000여 년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사회주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가는 사회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대강을 만드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할 시기에 제시한 ‘1개의 중심과 2개의 기본점’이다. 당시 중심이 경제건설, 혹은 4개 현대화이고 2개의 기본점은 개혁 개방과 4개의 원칙이었다. 4개의 원칙은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이다. 이제는 그 하나의 중심이 ‘중국의 꿈’으로 대체되었을 수 있으나 2개의 기본점은 여전히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준거라고 할 것이다.

2. 마오쩌둥 방식의 통치

시진핑은 2013년 1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혁 개방 전 30년으로 이후 30년을 부정할 수도, 이후 30년을 가지고 전 30년을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개혁 개방 전후의 역사는 서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²⁵⁾ 마오쩌둥 시기의 역사를 중국의 현재를 있게 만든 개혁 개방의 역사와 별개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개혁 개방 이전 마오쩌둥 통치 시기의 마오쩌둥이 보여주었던 혁명적 열정과 사회주의 건설의 노력을 결코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 개방 전후의 시기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어가는 실천과 탐색의 시기로 중국의 현대사에서 모두 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개혁 개방의 30년으로 개혁 이전의 30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신중국을 만

24) 資金星, 資金謙, “析析‘中國夢’及其實現路徑,” 『中國井崗山幹部學院學報』, 第6卷 第3期(2013), pp. 46-48.

25) 시진핑이 2013년 1월 5일 중앙 당교에서 행한 연설이다. 18차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18차 대회의 정신을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한 개설한 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http://www.dw.de/%E4%B9%A0%E8%BF%91%E5%B9%B3%E4%B8%8D%E8%83%BD%E5%90%A6%E5%AE%9A%E5%89%8D30%E5%B9%B4%E5%8E%86%E5%8F%B2/a-16500930>(검색일: 2014. 2. 3); “正确认识改革开放前后两个历史时期的关系,” 『新华网』, 2013年04月24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4/24/c_124625642.htm(검색일: 2014. 2. 3)

든 마오쩌둥과 선배들에 대한 찬사일 따름이다. 마오이즘을 현재 중국의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로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중국 사회에 마오에 대한 동경과 숭배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이런 마오이즘에 대한 향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등장하였으나 개혁 개방 이후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격상되지는 못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는 1981년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의 공과를 평가한 바 있다.

시진핑의 마오에 대한 인식은 전임자들의 인식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2013년 12월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과 중국 건설에 뛰어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고 “위대한 공헌 중에 일부 실수를 이유로 역사적 위업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은 “마오사상의 가치를 내릴 수 없으며, 만약 마오사상의 가치를 내린다는 것은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시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마오사상 가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마오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면서 마오사상의 핵심을 실사구시, 군중노선, 독립자주라는 말로 요약하였다.²⁶⁾

중국을 마오 시절의 이념적 지배와 정치 우선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적 세례를 받은 중국 인민들의 사유와 생활 양식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다음 세대들은 그 시절의 통치와 이념을 역사 속에서만 배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30여 년 간 실행해 왔던 상호의존적인 대외 협력과 무역의 발전을 거스르는 경제 발전 방식을 도모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국제정치경제 상황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자력갱생이라는 틀로 공박하기에는 중국도 이미 발을 깊숙이 들여놓은 셈이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 반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척결의지를 보여주었다. 시진핑은 2013년 1월 중국 공산당 기율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패와 관련된 인사들은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같이 잡아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부패 관련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끝까지 조사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권력을 제도의 새장 속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里)”면서 법치를 통해 부패 권력을 엄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권력은 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²⁷⁾ 시진핑은 반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척결 의지만만 아니라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허례허식을 철폐하는 ‘8개항 규정(八項規定)’²⁸⁾도 실시하였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26) 习近平, “在纪念毛泽东同志诞辰120周年座谈会上的讲话,” 『人民網』 2013년 12월 26일, <http://cpc.people.com.cn/n/2013/1226/c64094-23952651.html> (검색일: 2014. 1. 22).

27) 徐京跃、周英峰, “习近平在十八届中央纪委二次全会上发表重要讲话,” 『人民網』, 2013년 01월 22일, <http://politics.people.com.cn/n/2013/0122/c1001-20289699.html> (검색일: 2014. 1. 21).

28) 수행 차량과 수행원 숫자를 줄이고 접대는 간소하게하고 불필요한 표어와 플래카드를 내걸지 말 것이며, 군중을 동원한 마중과 배웅을 줄이며, 환영 카펫을 깔지 말고, 불필요한 꽃 장식을 삼가며, 파티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회의를 줄이고, 불필요한 전국대회나 경축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고 문건의 길이도 대폭 줄이며, 경비나 호위 작업도 단순화하고, 뉴스의 양이나 길이 등도 가능한 줄이며, 개인 저서의 발표는

를 체결하기 위한 '사풍(四風) 운동도 대대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정풍(整風) 운동 과정에서 과거 마오쩌둥 시기에 실행되었던 '군중노선'과 '자아비판' 등이 도입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유습에 경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비롯한 정풍운동 과정에서 이념적 정풍 운동도 동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치 마오쩌둥이 1940년대 실시한延安(延安)정풍운동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공산당의 사상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진핑의 이념적 정풍운동은 2013년 4월 당간부들에게 '9호 문건'을 보내 학습하게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시진핑은 '9호 문건'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체제에 대한 7가지의 위협한 요인(perils)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였다.²⁹⁾ 7가지의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서구적 입헌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가 거론되었다. 더불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언론 자유와 시민의 참여와 같은 서구적 영향을 받은 관념', '지나치게 친 시장적인 신자유주의', '당의 과거 실책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비판' 등이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주로 서구 사회와 국가가 역사 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성숙시켜온 문명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시진핑에 의해 이런 이념적 지침이 제기된 이후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입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개념을 비판하는 작업들이 전개되었다. 중국 내에서 서구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대와 법치, 시장화 개혁의 진전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개혁 정치가 퇴행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반부패 개혁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집정 초반의 권력 강화를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부패의 문제가 워낙 심각³⁰⁾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지속적으로 반부패 개혁을 실시할 5개년 계획이 당기율위원회에서 입안되었다. 이러한 사정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구호와 정책이 되살아났다. 인터넷과 정보를 통제하고 체제 비판자들을 구속하였으며, 군중노선, 자아비판에 관한 마오식 이념 교육이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헌법과 공산당의 위상에 관한 논쟁에서 공산당의 초월적 위상이 재확인될 정도로 보수적인 색채를 보여주었다. 우호적인 개혁을 기대했던 좌우 진영에서는 "시진핑의 통치철학에 대해 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생겨난 상황"이 되었다.³¹⁾

공산당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나거나 반정부와 반체제적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공안 통치가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공개하지 말 것이며, 불필요한 축하 카드의 남발도 줄이며, 각종 청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등의 규정을 말한다.

29) Chris Buckley,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August 20, 2013, <http://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pagewanted=1> (검색일: 2014. 1. 28).

30) 중국 공산당 8대 원로 후손들인 '홍색 부르조아지'의 특권을 이용한 축재와 시진핑 일가를 포함한 지도부 일가의 조세회피 및 축재에 관해서는 『한겨레』, 2012. 12. 28; 『한겨레』, 2014. 1. 23 참조

31) Cary Huang, "Jury still out on whether China's leader Xi Jinping is a reformer," *South China Morning Post*, 04 November, 2013, p. 4

년 1월 벌어진 남방주말(南方週末)과 신경보(新京報) 사건은 중국의 언론 자유와 언론 통제의 현실을 보여준다.³²⁾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공산당의 보도 지침에 대한 반발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정권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지시나 통제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체제적인 정치적 저항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신공민 운동'과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식인,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단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³³⁾ 향후 시민사회의 의식화와 조직화의 심화는 중국 공산당이 직면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안들이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 집정 이념과는 다른 '이념'들의 도전이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점차 그 이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중국정치모델' 혹은 '중국 민주화'에 관한 논의 역시 논쟁적이다.³⁴⁾ 에릭 리(Eric X. Lee)는 중국이 서방의 정치체제 보다 위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중국 정치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인식한다. 서방의 민주주의가 선거 민주주의라는 대표체제의 외피를 썼지만 그 민주주의의 충돌로 체제 작동 불능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에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것이다. 서방적 개념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 중국의 정치체제를 재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³⁵⁾ 그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적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권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명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개인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경제적 성장의 수행 성공만이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통계 사례라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주의와 도덕적 정통성이 공산당의 집정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일당통치를 크게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황야성(黃亞生)은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정치 개혁에 나서는 것과 파국적 위기 시에 어쩔 수 없이 정치 개혁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황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폭력적 혁명을 통하는 것보다 점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에게 더 유리한데 권력을 내 줄 필요 없이 집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 현 중국 체제는 죽게 된다는 것이다.³⁶⁾

32) 성연철, “남방주말·검열반대 파업·신경보’ 사설 강요에 저항, 중국 언론의 ‘반란’ 자유언론 불씨 되나” 『한겨레』, 2013. 1. 1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569206.html> (검색일: 2014. 1.20).

33) 『한겨레』, 2014. 1. 27.

34) 중국 내 지식인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희욱, 장윤미 편,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중국의 논의”(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버리치홀딩스, 2010); 김재관,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민주개혁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지식인 내부의 최근 논쟁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2권2호(2009), pp. 143-183 참조.

35) Eric X. Li, “Why China’s Political Model Is Superior,”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6, 2012, http://www.nytimes.com/2012/02/16/opinion/why-chinas-political-model-is-superior.html?_r=2&ref=global&(검색일: 2014. 1.19).

36) Eric X. Li, “The Life of the Party—The Post-Democratic Future Begins in China,”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pp. 34-46; Yasheng Huang, “Democratize or Die—Why China’s Communists Face Reform or Revolution,”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pp. 47-54.

한편 서방의 정치발전론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중국도 대부분 국가의 발전 경로를 뒤따를 것이라는 견해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발전, 즉 민주화가 뒤따른다는 주류적 정치발전론의 예외적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소득은 9200달러 정도인데 이는 대만과 한국이 민주화됐을 때의 소득 수준보다 낮다. 한국이 민주화되던 1980년대 후반 1인당 소득은 1만2000달러 정도였고, 대만의 1인당 소득은 1만4500달러 정도였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을 정통성을 삼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이, 바로 그 이유로 권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⁷⁾ 중국이 세계의 많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 않은 정치 발전 경로로 뻗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2020년까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과 두 배의 국민소득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계획이 크게 틀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기념식을 성대히 하기는 하겠지만 여러 정당 중의 하나로 창당 기념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3. 시장 기제의 확대와 거시적 통제

2012년 12월 시진핑은 총서기직을 승계받고 나서 최초의 지방 시찰로 광둥을 택하였다. 전임 지도자들이 항일 투쟁의 성지인 시바이포(西柏坡)를 찾아 현화한 것과 달리 경제특구 선전(深圳)을 찾아 련화산(蓮花山)에 우뚝 서 있는 덩샤오핑의 거대 동상에 참배하였다. 마치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이 보수파의 역공을 받을 때 이 지역을 시찰하면서 중단 없는 개혁 개방을 역설하였듯이(南巡講話) 시진핑 역시 선전, 주하이, 광저우를 시찰하면서 흔들림 없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시진핑 정권의 시장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경제적 사례는 상하이 자유무역역구일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도 혁신과 무역·투자의 편의 촉진, 개혁개방 확대 방안 모색이라는 사명을 띠고 준비된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금융 자율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의 병폐 중의 하나가 관치 금융에 따른 국유 기업의 비효율적 경영과 과잉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하이 자유 무역구에서는 금리를 통제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는 시장을 통해 산업 구조 조정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래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23년 정도 운영하다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정부는 2014년 1월 말 텐진(天津)시와 광둥성을 포함한 자유무역구 12곳을 추가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

18기 3중 전회의 개혁 의제는 시장 개혁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총론적으로 시장이 자원 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경제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는 내용으로 개혁 의제를 설정하였다. 시장 기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7) Jamil Anderlini, "How long can the Communist party survive in China?" *Financial Times*, September 20, 2013, <http://www.ft.com/cms/s/2/533a6374-1fdc-11e3-8861-00144feab7de.html#slide0> (검색일: 2014. 2. 1).

38) 『연합뉴스』, 2014. 1.22

시장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공유제 경제를 중시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혼합 소유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물, 전력, 천연가스, 교통 등 주요 자원에서 시장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개혁의제로 삼았다.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업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금리를 시장화하고 위안화의 자유태환 등의 조치를 취하로 하였다. 정부의 미시적 통제를 줄이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 문제 및 민생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민공(農民工) 생계향상 지원, 1가구 1자녀 정책 완화, 호구(戶口)제도 개선, 노동 교화소 폐지 등을 개혁 의제로 삼고 있다. 또한 계층·지역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화를 추진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생태지향의 발전 등도 포함되었다.³⁹⁾

시진핑은 18기 3중 전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와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國家安全委員會)의 책임자 역할까지 맡기로 하였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⁴⁰⁾과 함께 시장화 개혁과 더불어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8기 3중 전회에서 중요의제로 선택된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이 기구는 시진핑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개혁의 ‘상층설계’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⁴¹⁾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 정권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개혁과 관련해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널 수 있는(摸着石頭過河)’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게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설계부터, 추진, 감독을 상층부에서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개혁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적 발상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 ‘군중노선’과는 형식적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시장적 측면에서 보자면 일관되게 시장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로버트 줄릭은 시진핑 체제를 마오주의와 시장의 결합으로 특징지었다. 시장지향적 개혁을 심화하게 되면 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반대파의 통제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 개혁의 부작용

39)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二〇一三年十一月十二日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通過。”, 『人民網』, 2013. 11. 16, <http://politics.people.com.cn/n/2013/1116/c1001-23560979.html> (검색일: 2014. 11. 20); 이철용, “중국 3중전회 ‘점진적 개혁 통한 안정적 성장’ 노선 채택”, LG Business Insight(2013. 11. 20), pp. 36-42.

40) 전임 후진타오 정권에서 경제문제는 원자바오 총리가 관할하여 왔는데 시진핑 정권에서는 경제의 중요 문제를 총리인 리커창에게 맡기지 않고 시진핑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41) 상층 설계의 하향식 시도가 갖는 논란에 관해서 “시진핑의 개혁의지와 ‘상층설계’ 논쟁”, 『주간 금융브리프』, 22권 12호(2013), pp.20-21; Cheng Li, “China at the Tipping Point? Top-Level Reform or Bottom-up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4, No. 1(Jan. 2013), pp. 41-49.

용을 줄이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⁴²⁾ 중국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적 성취도 전면적 시장화가 아닌 통제적 시장화를 통해 시장의 무분별을 제어해 왔다 볼 수 있다. 시장을 도입하기는 하되 예측 가능한 시장의 기능만을 받아들이는 중국식의 국가 개입적 발전은 그 발전 유형이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발전 유형인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개입의 초고속 성장은 미국의 금융 공황과 겹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발전하여 '중국 모델'로 진화해 왔다.⁴³⁾ 중국이 극단적 시장 만능주의에 경도된 신자유주의를 따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자본주의라고 해도 달리 틀리지 않은 중국 상황에서 시장 기제의 전면적 작동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서방측의 음모론적인 공세이며 서방의 신식민주의적 이론 도구로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다.⁴⁴⁾

4. 이념적 정체성의 평가 및 전망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정권은 민족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정치적 구호로서의 '중국의 꿈'과 마오 방식의 통치술의 소환,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지만 여전히 거시적 통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좌우를 모두 실망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좌우에서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어떤 학자는 신좌파와 사민주의의 연대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중국 전문가는 마오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의 이념적 태도를 선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⁴⁵⁾ 시진핑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경제적 의제 설정과 추진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이념만으로 좌표설정을 할 수 없는 탓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공산당이 봉착한 고뇌이기도 하지만 시진핑 리더십이 아직 공고하지 못한 반증이기도 하다. 그가 집권 이후 보여준 시장 지향의 개혁과 좌파적 의혹을 부르는 행보는 이런 맥락에 읽

42) Robert Zoellick, "Beijing must pull off a mix of Mao and markets," Financial Times, December 1, 2013, <http://www.ft.com/intl/cms/s/0/e333f46c-5606-11e3-96f5-00144feabdc0.html#axzz2sVgCHECu> (검색일: 2014. 1. 27).

43) '중국 모델'에 관한 담론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식 발전이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의에서부터 개별 영역으로서 중국정치발전 모델, 경제발전모델의 담론이 혼재되어 발전되었다. 중국 모델론의 다양한 담론에 관해서는 장윤미, "중국 모델'에 관한 담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3집 1호(2011), pp.76-115; 전성홍, "중국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 『중소연구』, 통권 116호(2007/2008 겨울), pp. 15-53; 한광수, "중국의 발전 모델 논쟁, 시장 경제 부작용에 주목," 『Chindia Journal』 (2012. 3), pp. 31-33; Ling Tek Soon, "Perception of Reform: 'China Model' as Affi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Vol. 2, No. 1(April 2011), pp. 99-113; 천즈우, 『중국식 모델은 없다 :30년만에 우뚝 선 경제대국 중국 경제부흥의 미스터리』, 박혜린, 남영택 역(메디치미디어, 2011) 등 참조.

44) 中国社会科学院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研究中心, "从国际金融危机看西方新自由主义," 『人民日报』, 2012年 5月17日 <http://world.people.com.cn/GB/14549/17908005.html> (검색일: 2014. 1. 29),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져 온 것은 신자유주의인데, 서방측이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이 모델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정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혁신을 가로막고 부자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바다.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따른 병폐를 과장하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유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45) 이재호, "취임 1주년 맞은 시진핑, 앞으로의 중국은?" 『프레시안』, 2013. 11.1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9775>(검색일: 2014. 1.20).

을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초기의 퍼포먼스가 정당성을 강화하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의 구체적인 국정 철학, 즉 통치 이념이 새로이 보강될 것이다. 물론 그가 던진 화두였던 '중국의 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 방향으로 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양태를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정좌경우'(政左經右)의 현상은 시진핑 정권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위협하는 어떤 식의 사상적 틈입도 제지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 사회 내의 지식인 사회에서의 요구든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이해 관계의 분출이든 간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유연성이 있는 대처를 보여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 어떤 사상과 이념도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전은 금기인 것이다.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시장은 통제되고 간섭 받을 것이다. 시장화를 향한 점진적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좌파들이 주장하는 중국 사회의 비극적 양극화의 극복과 집산주의적 향수도 달래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 구조와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지도자의 선택과 선발,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가 갖는 구조적 속성으로 인하여 급작스런 노선의 전환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이런 타협과 내부 조율의 산물인 셈이다. 만약 이런 자정 능력이 실패하고 '동료 중에 우위'의 권력이 강화되어 이념적 극단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최고 권력 집단 내에서의 권력 투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의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진핑 정권은 이후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관과 비견할 통치 이념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시진핑이 말한 '중국의 꿈'은 통치 이념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꿈'은 시진핑의 창출한 것도 아닌 중국의 오래된 정치적 슬로건이다.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정 철학 및 통치 이념으로서 현실의 진단 속에서 중국 미래의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시진핑의 통치 구호의 개발이 후속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유연성을 보여준 장쩌민의 3개 대표론, 개혁 개방의 부정적 측면을 희석시킨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의 뒤를 잇는 그럴 듯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의 통치 이념 및 이론의 구축은 좌우를 넘나들거나 아우르는 내용을 집약하는 용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마오 노선과 덩 노선을 모두 다 차용하는 형태로 통치 논리를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오 방식의 이념 정치에 기대거나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특유의 국가 개입적인 발전 노선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외적 국제 환경의 변화에 어떤 수위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것이다. 시장의 확대와 심

화를 요구하는 TPP나 RECP, 한중일 FTA 성사 등은 중국을 좀 더 국제정치경제에 상호의존적인 국가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런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병리적 현상을 대중적으로 치유하거나 집산주의적 향수를 달래줄 포퓰리즘적인 정치 과정이 되풀이 될 것을 보인다. 시진핑 정권의 발전 모델은 제3세계 국가의 권위주의적 발전모델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정치 차원에서 순응적인 반대세력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공산당의 통치와 이것의 정당성 및 집정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일당 통치를 온존시키면서 내부적인 대항 정치 이데올로기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 부문에서는 시장 기제의 통제와 확대를 상황에 맞게 연출하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중국 특색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Ⅵ. 맺는 말

중국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으로 볼 때 시진핑 정권의 개혁 정치는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사유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이념적 논쟁에 자양을 제공하는 구 좌파와 사회민주주의파는 현 중국의 정치체제와 발전 양태를 고려할 때 이념적 친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마오 시절의 통치 체제는 현 중국의 발전 양태에서 집정 이념으로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공유제와 계획경제로의 환원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무위로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파도 당분간 득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변경하여 다당제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공산당 내의 민주파가 이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집정이념으로 채택되기에는 많은 논의가 내부적으로 숙성되어야 할 것이고 다당제가 논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이는 장쩌민의 3개 대표론보다 더 큰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현상적으로 신선하지는 않지만 시진핑 정권에서의 이념적 지향은 정치에서 우파로의 경사를 경계하며, 경제에서는 좌파로의 경사를 염려하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개혁정치에서 이념적 정체성의 논란은 그의 집권 초기의 통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고 적절히 정리해서 이제는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듯한 마오식의 통치 방식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진핑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으나 언론을 비롯한 호사카들이 앞선 나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시진핑이 마오 시절의 통치 방식을 차용한 것은 그만큼 중국 사회에서 마오 시절에 대한 향수가 팽배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또한 주기적이기는 하지만 공산당의 끊임없는 자정과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공산당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비책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초기 집정 능력의 향상과 권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대이념을 지우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인민들의 분배에 대한 욕구를 마냥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빈부격차를 방치하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논의하기에 앞서 세계와의 상호의존의 산물이다. 과거와 같은 고립주의적 자급 경제의 발전으로는 '중국의 꿈'을 운위할 수 없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얼마만큼 할 것이며, 국유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혁할 것인가, 수출위주의 정책에서 내수위주로의 성장모델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국 발전 모델을 좌우할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공산당의 영도를 저해하거나 침범하는 가치에 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 내에서 스스로 자유주의적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제3의 중국 혁명이 될지 모른다. 분명 경제가 더 상호의존적이 되고 발전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것은 중국 시민사회의 동시적 발전과 성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시기까지 중국 특유의 점진적 개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적 효율을 무시할 수 없으며 분배의 기제에 관여하는 국가의 역할을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추상화될 수 있는 중국의 발전 모델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퍼포먼스의 확보와 정치 지배 질서의 구축은 시진핑 정부에서도 여전히 과제가 될 것이다. 마오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마오를 공식적으로 불러들이는 정치적 행동은 자칫 경제적 세례를 받은 공민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급작스레 선화하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중국 경제가 갖는 세계사적 위상이 너무 커져 있으며, 중국 인민들이 경제적 개방의 경험으로 얻은 사유의 개방화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결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좌파적 유산을 결코 들어낼 수 없는 정치 부문과 시장과의 조화를 꾀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은 시진핑 정권에서 여전히 세련화될 것이다. 그것이 '중국적 예외주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제3세계의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의 아류일 것인가는 더 두고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 “시진핑의 개혁의지와 ‘상층설계’ 논쟁,” 『주간 금융브리프』, 22권 12호(2013).
- 김재관,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민주개혁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지식인 내부의 최근 논쟁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2권2호(2009).
- 마크 레너드,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중국 최고 지도부를 움직이는 지식 엘리트들』, 장영희 역(돌베개, 2011).
- 박민희, “중국의 꿈, 13억의 꿈,” 『계간 민주』, 통권 8호(여름, 2013).
- 박민희, “중국 전환의 기로에 서다- 덩쉐량 홍콩 과기대 교수 인터뷰,” 『한겨레』, 2012. 2. 29.
- 성연철, “남방주말 검열반대 파업 · ‘신정보’ 사설 강요에 저항, 중국 언론의 ‘반란’ 자유언론 불씨 되나” 『한겨레』, 2013. 1. 1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569206.html> (검색일: 2014. 1. 20).
- 손호철, 『현대 한국 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사회평론, 2003).
- 연뉴 안데르손,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박형준 역(책세상, 2014).
- 왕 후이, “충칭사건: 밀실정치와 신자유주의의 권토중래,” 성근제 역, 『역사비평』(2012년 여름).
- 이문기, “중국 지식인과 국가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중국학연구』, 제47집 (2009).
- 이재호, “취임 1주년 맞은 시진핑, 앞으로의 중국은?” 『프레스리안』, 2013. 11.1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9775>(검색일: 2014. 1.20).
- 이철용, “중국 3중전화 ‘점진적 개혁 통한 안정적 성장’ 노선 채택,” LG Business Insight(2013. 11. 20).
- 이희옥, 장윤미 편,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중국의 논의』(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 장윤미, “중국 모델에 관한 답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3집 1호(2011).
- 전성홍, “중국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 『중소연구』, 통권 116호(2007/2008 겨울).
- 전성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중국식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버리치홀딩스, 2010).
- 정승욱, 『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함께 books, 2013).
- 조정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글항아리, 2013).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민음사, 2013).
- 한광수, “중국의 발전 모델 논쟁, 시장 경제 부작용에 주목,” *Chindia Journal* (2012. 3), pp.

31-33.

- 해리슨 E. 솔즈베리, 『새로운 황제들 :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중국』, 개정증보판, 박월라, 박병덕 역(다섯수레, 2013).
- 『연합뉴스』
- 『한겨레』

- “The time of China's Power Struggle,”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4, 2013.
- “Xi Jinping and the Chinese dream,” *Economist*, May 4th 2013.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7070-vision-chinas-new-president-should-serve-his-people-not-nationalist-state-xi-jinping>(검색일: 2014. 1.22).
- Andrew Browne, “Communist Party Is Split Over Bo Xilai's Chongqing Policies,”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2, 2013,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730704579090170507137290?mod=WSJAsia_hpp_LEFTTopStories&mg=reno64-wsj&url=http%3A%2F%2Fonline.wsj.com%2Farticle%2F/SB10001424052702303730704579090170507137290.html%3Fmod%3DWSJAsia_hpp_LEFTTopStories(검색일: 2014.1.24)
- Cary Huang, “Jury still out on whether China's leader Xi Jinping is a reformer,” *South China Morning Post*, 04 November, 2013.
- Cheng Li, “China at the Tipping Point? Top-Level Reform or Bottom-up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4, No. 1(Jan. 2013).
- Chris Buckley,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August 20, 2013. <http://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pagewanted=1>(검색일: 2014. 1.28).
- Eric X. Li, “The Life of the Party-The Post-Democratic Future Begins in China,”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 Eric X. Li, “Why China's Political Model Is Superior,”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6, 2012. http://www.nytimes.com/2012/02/16/opinion/why-chinas-political-model-is-superior.html?_r=2&ref=global& (검색일: 2014. 1.19).
- He Li, “Debating China's Economic Reform : New Leftists vs. Liberal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5(2010).
- Jamil Anderlini, “How long can the Communist party survive in China?” *Financial Times*, September 20, 2013. <http://www.ft.com/cms/s/2/533a6374-1fdc-11e3-8861-00144feab7de.html#slide0>(검색일: 2014. 2.1).

- Jianmin Qi, “The Debate over ‘Universal Values’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72)(November 2011).
- Ling Tek Soon, “Perception of Reform: ‘China Model’ as Affi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Vol. 2, No. 1(April 2011).
- Robert Zoellick, “Beijing must pull off a mix of Mao and markets,” *Financial Times*, December 1, 2013. <http://www.ft.com/intl/cms/s/0/e333f46c-5606-11e3-96f5-00144feabdc0.html#axzz2sVgCHECu>(검색일: 2014. 1. 27).
- Yasheng Huang, “Democratize or Die -Why China’s Communists Face Reform or Revolution,”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3.)
- “正确认识改革开放前后两个历史时期的关系,” 『新华网』, 2013年04月24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4/24/c_124625642.htm(검색일: 2014. 2. 3).
-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人民网』, 2012年11月18日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html> (검색일: 2014. 1. 15)
- 徐京跃, 周英峰, “习近平在十八届中央纪委二次全会上发表重要讲话,” 『人民网』, 2013年01月22日, <http://politics.people.com.cn/n/2013/0122/c1001-20289699.html>(검색일: 2014. 1. 21).
- 資金星, 資金議, “試析 ‘中國夢’ 及其實現路徑,” 『中國井崗山幹部學院學報』, 第6卷 第3期 (2013).
- 中国社会科学院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研究中心, “从国际金融危机看西方新自由主义,” 『人民日报』, 2012年05月17日 <http://world.people.com.cn/GB/14549/17908005.html>(검색일: 2014. 1. 29).
- 习近平, “习近平在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闭幕会上发表重要讲话,” <http://lianghui.people.com.cn/2013npc/n/2013/0317/c357183-20816399.html>(검색일: 2014. 2.10).
- 习近平, “紧紧围绕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 学习宣传贯彻党的十八大精神 ——在十八届中共中央政治局第一次集体学习时的讲话,” http://news.xinhuanet.com/2012-11/19/c_123967017.htm(검색일: 2014. 1. 16).

Reforming politic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in Xi Jinping regime

Young Ju N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Xi Jinping, ideological conflict, Chinese political Model, Chinese Dream,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t initial stage of Xi Jinping regime ideological identity is somewhat confusing and ambiguous. The regime emphasizes the role of market mechanisms but as a way of politico- social reform in China, the governance of Mao Zedong-style approach such as self-criticism and crowds line is summoned. It have a constant emphasis on reform and opening up, but sticks to the Communist-leading one- party system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to achieve 'China's dream'. It have a intention to accomplish 'the China's dream' through 'the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ough Xi Jinping's individual power is comparatively strong, that is not free from collective-leading system. The leading role of communist party will never be changed and the caution about western liberal political thinkings and multi-party political system will be continuing.

China society that has been influenced by economic development will have a possibility to pose resistance at ruling ideology. 'China Model' might will be stranded because of deepening of interdependence in global political-economy. Xi regime will not select extreme ideology, maybe not. Mao-style ruling approach is merely used to reinforce political power and communist party-leading. Ideological orientation of Xi regime is like a subtype of developmental Authoritarianism in Third World and have a selective affinity at somewhere in the middle position between New Left and Social democratic attitude in terms of China's ideological terrain.